

## “해남 지진단층 존재 6.7 강진 대비해야”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

조선시대 4.1, 6.7 지진 기록

관측소 설치·운영 10일간

0.7 전후 지진 300차례 관측

당국 단층 조사 대응책 마련을



도 126.39~126.41로, 비슷한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 교수는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지진을 담은 연구 없

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사지진 자료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의 크기와 자세는 지진 자료를 연구·분석하면 확인이 되고, 단층면 크기를 보면 해당 단층이 일으킬 수 있는 지진 크기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도 지진 발생 시기는 예측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해남 지역에 임시 지진관측소를 설치·운영한 결과 10일 동안 규모 0.7을 전후한 지진이 300여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진 발생 횟수가 아니라 지진 패턴이 이례적이다. 특별히 본진이 무엇인지 가능성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규모 1.4 지진부터 2짜리 3짜리 며칠 지나 규모 2짜리 지진이 나오기 특별히 본진이 뭔지 모르겠다. 고만고만한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른바 ‘군발 지진’인데 이런 현상은 화산지역을 제외한 내륙에서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기상청 지진화산국 관계자는 “해남지진을 유발한 단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맞아보인다. 거리상 영광단층, 광주단층은 영향을 주기 힘들다. 단층 크기를 확인하면 유발 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김 교수의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역 발전소의 유체 주입으로 인한 유발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2018년 4월 27일 국제학제지진학 ‘사이언스’에 최초로 발표한 학자다. 정부 조사단은 김 교수 논문 발표 이후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은 인근 지역발전소의 물 주입이 촉발했다’고 결론지어 발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3 등교 다음날 수능 모의평가 21일 오전 광주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서산·인천 코로나 확진자 2명 광주 들러...접촉자 20여명 검사

고3 등교 185명 진단 검사

고3 학생의 등교가 시작된 상황에서 타지역 확진자 2명이 광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달 16일 이후 3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 20일 이후 각급 학교 학생 등 183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107명이 음성 판정을, 나머지 76명은 검사 중이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도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지역민 507명 전원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감염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남 서산 9번, 인천 미추홀구 27번 확진자가 광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산 확진자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자의 지

인으로, 19일 검체 채취 후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17일 오전 광산구 월계동 친척 집에 머물다가 같은 동의 갑자탕집, 골프존, 커피숍 등을 방문하고 밤 9시께 자차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친척 등 밀접 접촉자 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며 추가 접촉자 11명은 검사 중이다.

인천 확진자는 코인노래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증상이 나타났지만

19일 검사해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증상 발현 전인 10일 자차로 광주에 도착해 광산구 쌍암동 숯갈비 집과 친척 집을 방문한 뒤 광주를 떠났다. 인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접촉자 5명은 검사 중이다. 광주시는 이동 동선별로 방역을 마치고 CCTV, 신용카드 명세를 파악해 접촉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 민주, 5·18특별법·처벌법 당론 추진 연내 입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외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여야 공조를 통해 80년 5월 참혹했던 진상을 밝히고 5·18 역사 왜곡 방지를 통해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1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총회를 열고 5·18 외곡 처벌법 및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최우선 처리하는 ‘당론 법안’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미 당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5·18 외곡 처벌법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서 당론 법안 결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 발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보다는 5·18 유공자인 설훈, 유기홍 의원 등이 나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론 발의 법안이 되면 민주당 의석수(177석)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5·18 관련 법안을 지렛대로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조는 물론 국민 통합의 계기를 삼는다는 방침이다. 5월의 참혹했던 진상을 밝히고 더 이상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의 소장파 의원들, 정의당 등 군소 야

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면 많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2개 법률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법, 태권도의 국기 지정 법안, 코로나19 관련 3법 등 5개에 불과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BRO&T!PS**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NEVER OILY

ALL IN ONE

•전국 아리따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